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 어찌할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광주시 각 구청과 전남도 산하 공무원들의 징계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공무원 시국선언에 참여한 광주시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청 소속 공무원 5명, 전남도 시·군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이 결과를 오는 10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도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전남지역 징계 대상 공무원 13명 중 기획에 가담하거나 현장에 참석한 3명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정직, 감등 등 중징계를 요구한 상

행안부 “광주·전남 소속 18명 10일까지 처리하라”

해당 지자체, 노조 반발에 조사 지연 등 ‘눈치보기’

대다. 광주시에서는 4명이 중징계 대상이며, 1명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공무원으로서 성실, 복종, 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상 공무원들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이를

이 지방공무원법상 명시된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확인 조사하라는 지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징계 대상자를 상대로 현재 경위서, 참여 정도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노조 간부인데다 노조 측에서도 징계 철회

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징계를 위한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시대로 시간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징계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징계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징계 수위 등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어 징계까지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별기고

이정록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지리학〉



하고,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관계자의 말이 시샘이 날 정도로 부러웠다.

홍수와 지진 등 방재관리 1등 국가답게 도쿄와 요코하마, 오사카의 하천관리는 거의 완벽했다. 도쿄 스미다가와, 다마가와, 오사카 요도가와를 둘러보면서 영산강을 상상해 보았다. 요도가와는 올해가 하천관리 100주년이라고 한다. 남도의 젓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영산강의 하천관리는 몇 년이나 될까?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영산강을 관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리는 주민의 이용보다는 접근을 통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영산강 둔치가 좋은 예다. 둔치는 사람의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DMZ와 같은 공간이 된지 오래다. 제방도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제방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와 자전거를 즐기는 것은 사치다. 물이 없으니 유람선을 띄우는 것은 화성과 금성의 이야기다.

하천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선진국 하천관리 특징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명

지난달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오사카의 하천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영산강 살리기를 위한 좋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답사였다.

최근의 도쿄는 8년전 필자가 도쿄대 객원교수로 체류했던 도쿄가 아니었다. 특히 하천변의 다양한 체육과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서 뜻밖이었다. 경기체목도 피서를 가지 못했나 할 정도로 많았다.

도쿄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스미다가와(隅田川)에는 여전히 많은 관광객을 태운 수상버스(유람선)가 왕래하고 있었다. 2km의 강변에 조성된 스미다공원 체육시설에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1km의 제방에 식재된 빛나무 길이 만들어진 질푸른 녹음은 관광객의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했다.

영산강 살리기, 일본의 하천에서 배운다

도쿄 동쪽을 관통하는 아라가와(荒川) 둔치에는 운동과 피서를 즐기는 시민으로 가득했다. 강쪽은 영산강보다 약간 넓었지만, 수량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았다. 둔치는 미니골프장, 야구장, 복지체험광장, 생태학습장 등으로 깔끔하게 정비됐다. 매년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제방도로에는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도쿄도와 시나가와현의 경계인 다마가와(多摩川)의 풍경도 비슷했다.

요코하마로 유입하는 쓰루미가와(鶴見川)를 관리하는 하천관리센터의 전시관에는 방학숙제를 하기 위한 초등학생들로 붐볐다. 하천구역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대규모 운동장과 하천도에 조성된 대규모 휴게공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오사카를 관통하는 유로연장 75km의 요도가와(淀川)는 하천공원의 백화점이었다. 하천변에 조성된 39개의 공원지구(225.7ha)는 일본인답게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조성됐다. 하천공원의 연장이 약 30km에 달

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오히려 낮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중앙부처 하천관리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던 영산강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했다. 씩어 가던 분당 탄천과 울산 태화강이 새롭게 재탄생한 것을 보면, 영산강에겐 분명 기회가 있다. 어느 정권이 전문학적 재정을 영산강에 투입하겠는가.

핵심은 영산강 살리기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정치권, 환경단체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다. 다음 세대가 이용할 친수공간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하천을 만드는 것은 지역민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지역민이 영산강 살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도 유람선이 떠있는 영산강, 바베큐파티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과 벚꽃 길이 휘날리는 자전거길이 있는 영산강을 갖게 될 것이다.

도쿄의 스미다가와, 오사카의 요도가와와 같은 멋진 영산강을 그려본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일본 학겐천(鶴見川) 일대 전경. 학겐천 복원사업은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복원사업을 진행,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산강살리기’ 사무소 개소

나주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사무소가 설치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동수)은 2일 영산강 사업지구인 나주시 금천면 나주대교 부근 영산지구 현장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동수 청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광주·전남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저소득층 아동 돕자” 도민들 온정의 손길

전남도 ‘디딤씨앗통장’ 33억 적립...2,900명 혜택

전남도가 저소득층 아동의 대학진학 또는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추진중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후원이 답지하면서 33억여 원이 적립, 도내 2천9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지원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도민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상자는 가정위탁아동, 아동복

지시설 생활아동,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3천95명이다.

도는 일선 시·군과 기관단체 등에 ‘디딤씨앗통장’ 사업 후원자 모집에 나서 지난 8월 말 현재 18억8천200만 원을 적립, 대상 아동의 93.7%인 2천900명에게 매월 2만~3만 원을 적립하는 통장을 만들어줬다.

대상 아동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디딤씨앗통장은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에서도 최대 3만 원까지 일대일 매

칭핀드로 추가 적립해 14억5천300만 원의 적립금을 확보, 총 적립금은 33억 3천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생 1학년 아동이 후원금으로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3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 지원금 3만 원이 보태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0년 후에는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아동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부모나 위탁대리인이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후원 문의는 전남도 여성가족과 ☎(061) 286-5933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기초지방선거 국민운동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는 2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1인, 또는 소수 정당엘리트의 ‘공천독점제’로, 지역 주민의 후보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광주·전남본부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통해 획득한 지방권력은 주민자인 주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당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지역정치와 지방자치로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印尼 강진...수십명 사상

인도네시아 자바섬 인근에서 2일 오후 2시55분경 리히터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숨지는 등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의 해저 63km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의 프리리디 카르도노 대변인은 이번 지진 상황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습뉴스

광주 ‘의료용 임플란트 산업’ 본격화

3년간 39억 투입...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의료산업의 ‘불모지’인 광주에서 의료용 임플란트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료용 임플란트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RIS(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사업단’ 사무실 개소식이 3일 조선태 치과대학에 열린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인 ‘2009년도 RIS’에 광주시가 선정돼 추진된다.

올해부터 3년 간 총사업비 39억여 원(국비 21억 포함)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RIS사업(총괄책임자 안종모 조선태 치대교수)은 광주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한국광기기술원, 서강정보대, 동아인재대 등이 참여한다.

사업단은 인체·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생체용 임플란트를 이용한 인공심장 및 허혈성 심내 혈관 스텐트 임플란트, 인공 고관절 임플란트, 치과 임

플란트 등 고기능 생체용 임플란트 부품소재를 집중 개발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의료용 임플란트 관련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해 임플란트산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환 시 경제산업국장은 “건물 신축이나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른 지역사업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며 “지역의 새로운 수출 주도형 생체 융복합산업으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nd rows, likely a schedule or list of items.